

경제 규제혁신 TF  
23-6-1  
(공개)

##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

2023. 4. 19.

관계부처합동

#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 경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 . 주요 특징 .....                    | 2  |
| III 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.....           | 3  |
| IV . 향후 계획 .....                    | 11 |
| <참고 1> 과제별 추진 계획 .....              | 12 |
| <참고 2> 과제별 부처 담당자 .....             | 14 |
| <참고 3> 공공기관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목록 ..... | 16 |

## I. 추진 경과

◇ 그간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개선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 ⇨ 7.7조원 민간투자 지원

□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구성\*·운영(6.23~)하여 규제혁신 추진

\* 경제부총리, 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/ 정부위원(11명)보다 많은 민간위원(12명)

□ 지난 '22.7.28,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

○ 기업·경제단체·협회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119개를 개선하고 이행 점검 중

○ 이와 함께 중소·벤처, 외환, 조달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6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 발표

<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현황 >

| 회차  | 일자        | 안건                       | 상정부처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차  | '22.7.28  | 1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          | 기재부     |
| 2차  | '22.9.5   |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          | 기재부     |
|     |           |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             | 기재부·환경부 |
| 3차  | '22.10.17 |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          | 기재부     |
|     |           | 제1차 중소·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     | 중기부     |
|     |           |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            | 국토부     |
| 4차  | '23.2.10  | 외환제도 개편 방안               | 기재부     |
|     |           |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      | 조달청     |
|     |           |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         | 국토부     |
| 5차* | '23.3.2   | 기업투자·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| 기재부     |

\*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(국무총리 주재) 안건 상정

□ 금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, 신산업·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총 55개 개선과제 발굴

## II. 주요 특징

◇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,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

### ①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→ 민간 투자 6천억원 지원

- 규제,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애로 해소
- 직접적 규제 완화 외에도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규 공장 건설 관련하여 규제 걸림돌이 없는 대안 부지를 제안하고,
  - 미활용 국유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3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실시

### ② 공공기관을 통해 발굴한 규제에 대한 개선

-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개선\*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\*\*
  - \* 자체개선 가능과제는 공공기관 내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통해 추진 중
  - \*\* 2023년 경제정책방향(22.12.21)에서 각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
  - '22.11~'23.2월간 총 5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115개 발굴 ⇨ 41개 과제\* 개선
  - \* 주요 과제 7건 외 전체 과제는 '공공기관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목록(참고3)' 참고
  -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 추진

### ③ 규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노력 지속

- 주요 경제단체, 협·단체, 기업 간담회 등 민간·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·개선 노력 지속

### Ⅲ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

- ◇ ❶기업의 현장애로 해소, ❷신산업·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, ❸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 총 21개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

#### 1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 해소

##### 1 투자프로젝트,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 [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]

- (현행) 글로벌 제약기업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
- (개선)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하여 제시함으로 신규 투자 유치

[조치사항] '23.2분기까지 기업 측에 대안 부지 제시

##### 2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 [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]

- (현행)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(국유지\*)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\*\* 임대 등 절차 미착수

\* (면적) 4.8만평, (지목) 잡종지('16.1.27일 지정), (지역지구) 일반공업지역  
(소유자) 국가(관리청: 해양수산부 대산청)

\*\* 통상 준설토 투기 완료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등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, '23.8월 투기 완료 예정

- (개선) 유허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신속한 임대절차\* 추진

\* 배후부지 활용방안 용역('23.5월~) → 기업 수요조사 → 활용계획 확정('23.8월) 계획

[조치사항] '23.3분기까지 대산항 서측 투기장 임대 공모

### ③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,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[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]

- (현행)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\*(관광사업시설용지 추가) 필요  
\* 현재는 "그 밖의 시설용지(대게축제장 및 소공원)" 목적
- (개선)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(해수부 차관 주재)를 신속히 개최 하여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 심의\*  
\*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, 산업 발전·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가능

[조치사항] '23.2분기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
### ④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

- (현행) 대규모 사업장\*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(환경부)」과 「집행관리 및 예산편성 지침(환경부)」 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하여 관련 기업이 보조금 신청에 애로  
\*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한 경우로 1개 사업장 면적이 전체의 75% 이상이거나 1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의 80% 이상인 경우
- (개선)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과 「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」 상 지원대상 불일치 해소\*  
\* 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: (현행)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→ (개선) 좌동 집행관리및예산편성지침: (현행) 지원대상에서 제외 → (개선)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

[조치사항] '24.1분기까지 관련 지침 개정(지침 개정 전까지 해석을 통해 불일치 해소)

### ⑤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 실시

- (현행)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시 국가유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
- (개선)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\* 실시  
\*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규제(예: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) 적용 여부,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여부 등

[조치사항] '23.2분기부터 사전컨설팅 실시

## 2 신산업 ·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

### 1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

- (현행)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\*되나,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 지연

\* (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, '19.1월) 수전해, 해외생산·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생산량을 13만톤('18년) → 526만톤('40년)으로 확대

-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도 어려움

- (개선) R&D\*,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(IMO) 논의 사항\*\*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 마련

\* 국가연구개발사업(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사업) 진행 중('20~'24년)

\*\* 국제해사기구(IMO)는 화물·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(CCC)에서 수소연료 추진 선박 기술기준 검토 중이며, '25년 하반기 잠정기준 마련 예상

**[조치사항]** '25.4분기까지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의 수소선박 안전기준 마련

### 2 신소재 · 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

- (현행) 고망간강\* 소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액화수소 저장탱크 형태도 일반적인 모양(실린더 또는 구)만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형태로 제작 곤란

\* 망간이 11~14% 함유된 합금강으로 내충격,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기존 니켈합금강, 스테인레스강 대비 성능 및 경제성이 우수하나, 액화수소 온도(-253도)에서 안전성 여부가 미확인

- (개선)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·형태(예: 각형)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마련\*

\* 국산화 모델 개발(R&D, '21.5월~'24.4월) 및 실증사업('24년 하반기) 추진 예정

**[조치사항]** '24.4분기까지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안전기준 마련

### ③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(ESS)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[한국중부발전(주)]

- \*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(Energy Storage System)
- (현행)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10,000kW 이상 규모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대상
- (개선) 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·풍력·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(100,000kW)으로 완화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

### ④ 국민 수요반응(DR, Demand Response) 참여 조건 완화 [한국전력거래소]

- \* 개별 입주세대가 가정·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제도
  - 특정요건 발생시(수급비상, 미세먼지 등) 국민들이 전력소비를 감축(급속충전기 충전 조정 등)하고, DR 참여 전·후 전력사용데이터를 비교하여 전력사용절감분 보상
- (현행) 고용량 급속충전기(예: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) 보급이 확산되었으나, 국민 DR 참여자격은 70kW 이하 저용량 충전기로 제한
- (개선) 국민 DR 참여자격을 70kW → 200kW로 확대

[조치사항] '22.12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(기조치)

### ⑤ 클라우드 펀딩 방식 등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(공모문전사) 설립 허용

- (현행) 공모문전사가 업무를 위탁\*하여야 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한 세부 등록요건이 없어 사업관리자 등록 및 공모문전사 설립 불가
  - \* 문화상품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등
- (개선)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에 대한 인력·설비·자본금 등 세부 등록요건 마련

[조치사항] '23.3분기까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



## 6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

- (현행) 사용계획이 미확정된 국유림은 풍력발전용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,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은 임대 불가
- (개선) 선도 산림경영단지\*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더라도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재해위험이 없는 범위\*\* 내에서 풍력발전용 임대 허용

\* 목재의 안정적 수요·공급 우량 목재 증식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(경제림육성단지)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(산림청장이 선정)

\*\*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그동안 산림사업 등에 투입된 비용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서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[조치사항] '23.2분기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

## 7 상업용 CO<sub>2</sub>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

- (현행) 상가 내 상업용 세탁소에 CO<sub>2</sub> 세탁기\*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3인 선임 의무 등이 적용되어 사실상 설치 곤란
- \* 액체 CO<sub>2</sub>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써 사용한 CO<sub>2</sub>는 재생 과정을 통해 재활용 / 물과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제품
  - 미국·유럽 등에서 드라이클리닝 세탁의 대안으로 CO<sub>2</sub> 세탁기\*를 개발 및 상용화 중이며('02년~),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을 개발 중
- (개선) 안전성이 확보된 CO<sub>2</sub>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('22.1월~'23.12월)을 거쳐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

[조치사항] '24.4분기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## 3

##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

## ① 산지 전용·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

\* 산지를 조림, 임산물 채취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,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

- (현행) 5,000m<sup>2</sup> 이상 산지전용 시 유사한 재해영향평가(자연재해 대책법)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(산지관리법)가 이중규제로 작용

\* 660~5,000m<sup>2</sup> 산지를 전용할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만 제출(재해영향평가 미적용)

- (개선) 5,000m<sup>2</sup>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

\* 재해영향평가는 산림재해 위험성 검토 이외에도 사면·토사·해안 등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검토

| 산지 전용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|           | 개 선    |           |
|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  | 재해영향평가 | 재해위험성 검토서 | 재해영향평가 | 재해위험성 검토서 |
| 660m <sup>2</sup> ~ 5천m <sup>2</sup> 미만 | 미제출    | 제출        | (좌 동)  |           |
| 5천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| 제출     | 제출        | 제출     | 생략        |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
②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 
[안전보건공단]

\*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,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제출하고,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

- (현행) 반도체 산업은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,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 제출 의무
- (개선)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\*를 선정하여 도면을 작성·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(공단이 동일·동종설비로 승인한 설비)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

\* 동일 모델 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가 가장 많은 설비

[조치사항] '23.1월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(기조치)

### ③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인증(KCS) 면제대상 확대 [안전보건공단]

\* 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기계·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·생산체계를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

- (현행) 안전인증 제도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해 면제 중이나,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·기구\*에는 적용

\* 위험기계·기구를 수입하여 조립·가공 후 국내 사용이 아닌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한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해 안전인증 실시

- (개선) 안전인증 면제를 수출 목적의 “수입품”에도 적용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

### ④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 완화 [안전보건공단]

\* 산업현장에서 안전·보건관리, 안전인증·검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기관

- (현행) 1년 주기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매년 평가 실시  
→ 성과 제고 인센티브가 미흡하고, 평가부담 요인으로 작용

- (개선) 평가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 평가(S등급)를 2년 연속 받은 경우, 익년도 평가를 면제

[조치사항] '23.2분기까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

### ⑤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 [한국직업능력연구원]

- (현행) 계약예규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)에서 제안서 제출\*의 예외적 방법에 직접제출(방문제출)을 명시하지 않아 직접제출 제한

\* (원칙)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 / (예외) 전자우편·우편  
-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방법에 직접제출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 판단('20년)

- (개선) 제안서 제출의 예외적인 방법에 직접제출도 허용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계약예규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) 개정

## ⑥ 해양 개발계획·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[여수광양항만공사]

\* 해양공간을 이용·개발할 경우 사전에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(해양공간적합성협의)

- (현행)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완료한 해양 개발계획·구역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합성협의 재이행
- (개선) 경미한 계획 변경(매립 위치 변경 등)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경미한 변경시 약식 협의\* 시행

\* (예) (現)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위 검토 후 결정 → (改) 해수부가 자체 결정

[조치사항]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후 '24.1분기까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개정

## ⑦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 설계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

- (현행)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승인 대상(설계 승인)
- (개선)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\*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(※입법예고 완료, '23.2.27)

\* 초가이영잇기, 예초, 방제, 창호지바르기, 기존시설물 보수, 잡목·고사목제거 등

[조치사항] '23.3분기까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

## ⑧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

- (현행)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(상호, 주소지, 대표자, 임원)시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제출해야 함
- (개선) 변경신고시 사업자등록증 면제(행정정보 공동이용 '본인정보 제공동의'를 받아 민원처리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 열람)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

## 9 전승공예품\* 인증절차 개선

\*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  
(예: 매듭·자수 등 섬유공예품, 나전 등 목칠공예품)

- (현행)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기 위한 소요기간이 길고(180일), 인증항목인 유해성 검사(문화재청)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안정성 검사와 중복되는 측면
- (개선)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(180→150일)하고, 문체부 안정성 검사 통과 공예품은 유해성 검사 면제

[조치사항] '23.4분기까지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,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

## IV. 향후 계획

-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·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

☞ 5월 중 7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

-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.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

- 지속적 과제 발굴 +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+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는지,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

☞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등 규제개선 사이클 관리

## 참고 1

## 과제별 추진 계획

| 번호  | 정책과제   | 일정      | 부처   |
|-----|--|---------|------|
| 1-1 | 투자프로젝트,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<br>(기업측에 대안 부지 제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.2분기 | 산업부  |
| 1-2 |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<br>(대산항 서측 투기장 임대 공모)  | '23.3분기 | 해수부  |
| 1-3 |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,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<br>(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안전 상정)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.2분기 | 해수부  |
| 1-4 |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<br>(공공처리폐수시설 '24년도 집행관리 및 '25년도 예산편성지침 수립시 반영)   | '24.1분기 | 환경부  |
| 1-5 |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컨설팅 실시<br>(사전컨설팅 실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.2분기 | 문화재청 |
| 2-1 |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<br>(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수소선박 안전 잠정기준 마련)                | '25.4분기 | 해수부  |
| 2-2 | 신소재·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<br>(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관련 안전기준 마련)                  | '24.4분기 | 산업부  |
| 2-3 |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<br>(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.4분기 | 환경부  |
| 2-4 | 국민 DR 참여 조건 완화<br>(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)   | 기초치     | 산업부  |
| 2-5 |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 설립 허용<br>(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)<br>※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('23.3분기) | '24.4분기 | 문체부  |
| 2-6 |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<br>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.2분기 | 산림청  |
| 2-7 | 상업용 CO <sub>2</sub>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<br>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)                  | '24.4분기 | 산업부  |

|     |   |         |      |
|-----|---|---------|------|
| 3-1 |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<br>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                     | ‘23.4분기 | 산림청  |
| 3-2 |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  | 기초치     | 고용부  |
| 3-3 |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대상 확대<br>(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)               | ‘23.4분기 | 고용부  |
| 3-4 |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 완화<br>(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) | ‘23.2분기 | 고용부  |
| 3-5 |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<br>(계약예규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) 개정)                 | ‘23.4분기 | 기재부  |
| 3-6 | 해양 개발계획·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<br>(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)           | ‘24.1분기 | 해수부  |
| 3-7 |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 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<br>(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)                   | ‘23.3분기 | 문화재청 |
| 3-8 |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<br>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‘23.4분기 | 문화재청 |
| 3-9 |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개선<br>(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,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)             | ‘23.4분기 | 문화재청 |

## 참고 2

## 과제별 부처 담당자

| 과제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처명                |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| 담 당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-1 | 투자프로젝트,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  | 산업통상자원부<br>투자유치과   | 남명우 과장<br>044-203-4080 | 전종형 사무관<br>044-203-4089 |
| 1-2 |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                | 해양수산부<br>항만투자협력과   | 주상호 과장<br>044-200-5960 | 윤성환 사무관<br>044-200-6077 |
| 1-3 |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,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 | 해양수산부<br>해양공간정책과   | 김인경 과장<br>044-200-5260 | 이경환 사무관<br>044-200-5268 |
| 1-4 |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   | 환경부<br>수질수생태과      | 박판규 과장<br>044-201-7060 | 박상동 사무관<br>044-201-7068 |
| 1-5 |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컨설팅 실시     | 문화재청<br>보존정책과      | 김명준 과장<br>042-481-4830 | 이희영 사무관<br>042-481-4835 |
| 2-1 |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      | 해양수산부<br>해사안전기술과   | 이창용 과장<br>044-200-5830 | 김세준 사무관<br>044-200-5838 |
| 2-2 | 신소재·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| 산업통상자원부<br>에너지안전과  | 황윤길 과장<br>044-203-3980 | 박경민 사무관<br>044-203-3985 |
| 2-3 |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     | 환경부<br>국토환경정책과     | 차은철 과장<br>044-201-7270 | 이진희 사무관<br>044-201-7271 |
| 2-4 | 국민 DR 참여 조건 완화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<br>전력시장과   | 강경택 과장<br>044-203-3910 | 정지웅 주무관<br>044-203-3916 |
| 2-5 |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 설립 허용          | 문화체육관광부<br>문화산업정책과 | 윤양수 과장<br>044-203-2411 | 채창렬 사무관<br>044-203-2425 |
| 2-6 |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              | 산림청<br>국유림경영과      | 송준호 과장<br>042-481-4090 | 조성국 사무관<br>042-481-4098 |
| 2-7 | 상업용 CO <sub>2</sub>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  | 산업통상자원부<br>에너지안전과  | 황윤길 과장<br>044-203-3980 | 배재형 사무관<br>044-203-3983 |



| 과제명 |   | 부처명              |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| 담 당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-1 |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<br>재해위험 관련<br>행정절차 부담 완화          | 산림청<br>산지정책과     | 도재영 과장<br>042-481-4140 | 박승규 서기관<br>042-481-4123 |
| 3-2 | 반도체 장비<br>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<br>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화학사고예방과 | 심우섭 과장<br>044-202-8965 | 신백우 사무관<br>044-202-8969 |
| 3-3 |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<br>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<br>안전인증 면제대상 확대     | 고용노동부<br>산업안전기준과 | 박원아 과장<br>044-202-8850 | 김영남 사무관<br>044-202-8853 |
| 3-4 | 업무성과가 우수한<br>민간재해예방기관에<br>대한 안전보건공단<br>평가 부담 완화 | 고용노동부<br>산업안전기준과 | 박원아 과장<br>044-202-8850 | 김철수 사무관<br>044-202-8852 |
| 3-5 |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<br>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                  | 기획재정부<br>계약정책과   | 류중재 과장<br>044-215-5210 | 강석훈 사무관<br>044-215-5214 |
| 3-6 | 해양 개발계획구역의 경미한<br>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               | 해양수산부<br>해양공간정책과 | 김인경 과장<br>044-200-5260 | 이정훈 사무관<br>044-200-5263 |
| 3-7 |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<br>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                  | 문화재청<br>수리기술과    | 곽수철 과장<br>042-481-4860 | 이승재 사무관<br>042-481-4864 |
| 3-8 | 문화재 매매업<br>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재청<br>안전기준과    | 이재원 과장<br>042-481-4933 | 김흥년 사무관<br>042-481-4923 |
| 3-9 |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립무형유산원<br>전승지원과 | 권오현 과장<br>063-280-1440 | 장해숙 사무관<br>063-280-1531 |

### 참고 3

### 공공기관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목록

| 연번 | 과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기관       |
|----|--|------------|
| 1  |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안내 등 전자고지 확대           | 근로복지공단     |
| 2  |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업무상질병판정서·심사결정서 공개          |            |
| 3  | 근로복지공단·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건강진단결과표 전산 자동 연계     |            |
| 4  | 근로복지공단병원 고객용 모바일 솔루션 구축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5  | 산재 근로자 입증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       |            |
| 6  | 산재 승인 후 요양·보험급여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           |            |
| 7  | 산재 요양급여의 통합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8  | 산재보험법상 법령위반 사고의 고의·중과실 판단기준 마련         |            |
| 9  |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요양과 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직업능력강화훈련 병행 허용 |            |
| 10 |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모바일 신고 서비스 구축         |            |
| 11 | 특고 고용·산재보험 신고서식 단일화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2 |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방식 간소화                     | 노사발전재단     |
| 13 |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인증요건 판단 관리체계 개선           | 사회적기업진흥원   |
| 14 |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5 | 과로사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모바일 신청 허용             | 안전보건공단     |
| 16 | 기초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이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7 | 민간위탁사업 참여제한 조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8 |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주기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9 |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제출도면 범위 조정          |            |
| 20 | 부적합 통보받은 안전체험교육의 부적합 사유 해소시 즉시 재신청 허용  |            |
| 21 | 수입목적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2 |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평가기준 합리화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3 |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등 업무 위탁기관 제한 완화           |            |
| 24 |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5 |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고시 기준 합리화           |            |
| 26 |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출석자 범위 명확화           |            |
| 27 | 수입자의 MSDS 영업비밀 비공개승인 대체자료 연계 허용        |            |
| 28 |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재협의의 기준 마련 및 절차 간소화          | 여수광양항만공사   |
| 29 | 중수도 이용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허용               | 인천국제공항공사   |
| 30 | 폐쇄된 취수지역인 경우 공장설립 허가(기허용)             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| 31 | 도시가스사업법상 물량교환 시행에 따른 시설이용조건 완화         | 한국가스공사     |
| 32 |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          | 한국고용정보원    |
| 33 | 사업주훈련의 훈련과정 인정·반려 등 업무처리 기간 기준 개선      | 한국산업인력공단   |
| 34 | 방류종자인증제 사업 대상종을 훈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          | 한국수산자원공단   |
| 35 | 도급승인 대상 작업 관련 판단기준 개선(기허용)             | 한국수자원공사    |
| 36 |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중복사항 통합·개선          | 한국인터넷진흥원   |
| 37 | 국민 DR 참여조건(70kW→ 200kW 이하) 완화          | 한국전력거래소    |
| 38 | 중소형 DR에 한하여 통합자원 구성 허용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39 |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            | 한국중부발전     |
| 40 |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의 직접제출 허용               |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|
| 41 | 환경신기술 협약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                  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|